

영국 노동당 新정부의 주요 이슈별 예상 정책방향

I

영국 총선 결과 및 배경

□ 7.4일 영국 총선 결과, 노동당이 과반 의석을 크게 상회*하는 압승 (landslide victory)을 거두며 14년 만에 정권이 교체

* 하원 650석 중 노동당 412석, 보수당 121석, 자유민주당 72석, 스코틀랜드국민당 (SNP) 9석 등을 각각 차지

○ 금번 선거 결과는 2010년 보수당 집권 이후 경제, 이민, 보건 부문의 상황이 악화된 데다, 2022년 무리한 감세 추진으로 시장 불안이 촉발되는 등 안정적인 정책 운영에도 실패했다는 인식이 팽배해진 데 주로 기인

⇒ 노동당 新정부가 국정 운영시 직면한 주요 이슈별 예상 정책 방향을 노동당 manifesto, 주요 정책 think-tank, 언론 기사 등을 통해 미리 가늠해 보고자 함

II

주요 이슈별 예상 정책 방향

※ 노동당 manifesto, 여론조사 기관, 정책 think-tank, 언론 등은 향후 주요 이슈로,

* Labour Party, Yougov.com, Politico, Chatham House, IFS 등의 주요 보고서 참조

- | |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① 경제 성장잠재력 제고 | ② 효과적 이민자 관리 |
| ③ 건강보험(NHS) 개선 | ④ 국가 안보 강화 |
| ⑤ 건전 재정 유지 |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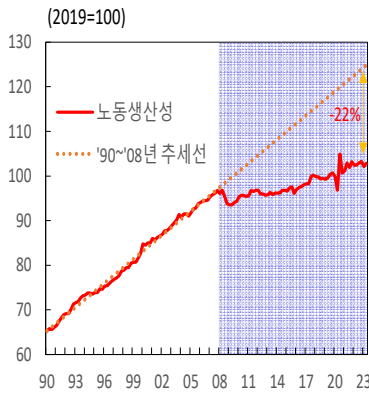
등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하여 동 이슈별 노동당 신정부의 향후 예상 정책방향을 정리

[현황]

- 투자 부진이 장기화되며 2010년 이후 생산성 증가율이 G7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성장잠재력이 크게 약화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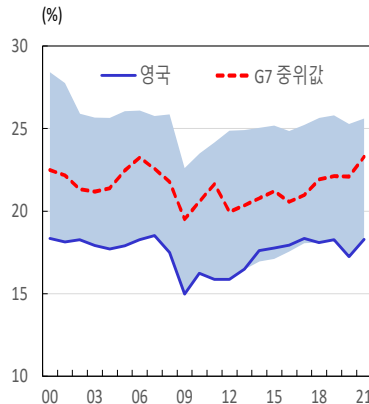
* 영국의 생산성 악화와 그 원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런던사무소 조사연구 자료 (2023.12월) “영국의 노동생산성 둔화 원인 및 시사점”을 참조

- 더욱이 **Brexit 이후** 강화된 **border check**은 **교역량 손실**을 초래하고 농축 상품 등의 **물가상승 요인**으로 작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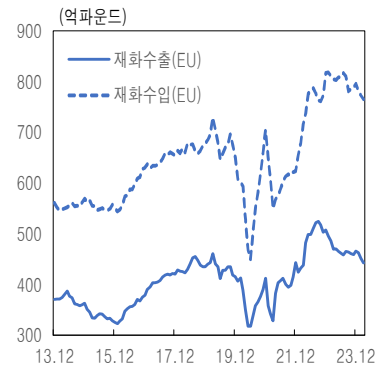
영국의 노동생산성¹⁾ 추이

주: 1) 노동시간당 총부가가치 (GVA) 기준
자료: 영국 통계청(ONS)

주요국 GDP 대비 투자 비중



자료: World Bank

영국의 대 EU 교역규모¹⁾

주: 1) 직전 3개월 합산 기준
자료: 영국 통계청(ONS)

[정책방향 및 주요 조치]

- 노동당이 G7 중 가장 높은 지속가능한 성장 확보를 목표로 내건 만큼 투자 부진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책 추진이 예상되며, Brexit로 인한 교역량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그간 소원했던 EU와의 관계 개선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

- (투자 확대) 73억 파운드 규모의 **National Wealth Fund***를 조성해 제조업 혁신을 위한 **인프라 투자를 확대**

* 동 펀드 실행 방안은 노동당이 전 영란은행 총재 **Mark Carney**에 의뢰해 제출받은 것으로 전문(2024.7.9.일, FT). 공공투자 1파운드 당 민간투자 3파운드 유치하여 73억 파운드 펀드를 조성해 항만 등 인프라 개선(18억 파운드), 자동차 산업 기가 팩토리 투자(15억 파운드), 철강 산업 재건(25억 파운드), 탄소포집기술, 그린수소생산 등 그린 투자 사업(15억 파운드) 등에 사용할 방침

- (교역량 회복) 노동당은 집권기간 중 EU로의 복귀는 없을 것*이라는 입장이나, EU와의 관계 개선에 나서 불필요한 국경검사 및 식품가격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수의검역(veterinary) 협정을 추진할 방침**

* Keir Starmer 총리는 EU 재가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("Yesterday he said that the UK would not rejoin the EU within his lifetime.", 2024.7.4.일, "Eurointelligence: Not in his lifetime")

** 그러나 Eurointelligence는 EU와 영국간 무역관련 규제 차이가 이미 벌어져 있고 향후 더 벌어지게 되면 이를 조율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, EU가 경쟁자인 영국을 몰아내기 위한 자체 규제 조정을 행할 수도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해 영국 노동당이 추진할 영국-EU간 무역협정 조정의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견해를 제시(2024.6.24.일, "Eurointelligence: Starmer and the EU")

- 또한 미국과의 무역협정 추진 등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전문*되어 트럼프 재집권시에는 관련 협상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

* 2024.5월 당시 그림자 외무장관(현 외무장관)이었던 David Lammy의 워싱턴 방문시, Heritage 재단 등 공화당 인사와의 회동에서 양측은 영미 무역협정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으며 북미자유무역협정 가입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짐(2024.7.5.일, Telegraph)

2 효과적 이민자 관리

[현 황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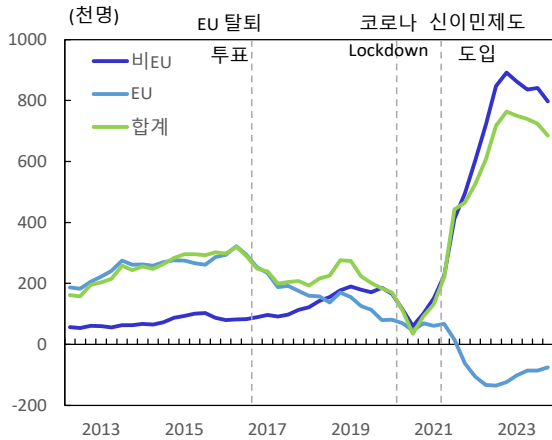
- 코로나19 이후 학업 및 취업자를 중심으로 이민자가 급증하고, 최근에는 소형 보트 등을 통해 영국 해협을 건너오는 불법 이민자도 늘면서 이들에 대한 사회보장비용 부담 확대 및 일자리 부족 우려 등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

- 이에 지난해부터 영국 정부는 순 이민자수 30만명 축소를 목표로 학생, 숙련 노동자, 가족 비자 발급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, 르완다 계획*을 중심으로 한 불법 이민자 억제 정책을 추진**

* 영국 정부가 르완다에 일정 대가를 지불하는 대신, 소형 보트 등을 타고 영국 해협을 넘어온 불법 이민자들을 르완다로 강제로 이송해 망명 신청 처리 및 사후 관리를 위탁하는 협약. 2022.4월 협약 체결시 초기 비용으로 1억 2천만 파운드를 지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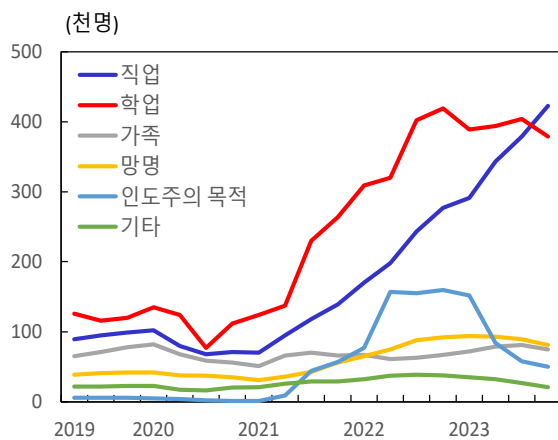
** 최근 영국 정부의 이민 정책 관련 자세한 내용은 런던사무소 동향분석 자료(2024.6월) "최근 영국의 이민 정책 방향성과 향후 전망"을 참조

영국의 순 이민자 수 추이



자료: 영국 통계청(ONS)

사유별 이민자 수 추이



자료: 영국 통계청(ONS)

[정책방향 및 주요 조치]

□ 학업, 취업 등 **합법적 이민과 관련해서는 순이민 감축 정책 기조**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이나 **불법적 이민 대응조치**로 기존 보수당 정부가 추진 중이었던 **르완다 계획은 백지화**할 전망

○ (합법적 이민) 기존 보수당 정부 정책을 이어가되, **건강 및 돌봄서비스 관련 이민자 가족 동반은 유지**하는 등 영국이 일자리 부족을 겪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 검토

○ (불법적 이민) **기존의 르완다 계획을 폐기***하는 대신 불법이민을 지원하는 갱단 소탕을 위해 국경보안부서(Border Security Command)를 신설하고 국경보안 관련 **EU와의 협력을 보다 강화**해 나갈 계획

* Keir Starmer 총리는 총리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르완다 계획이 불법 이민에 대한 억지력을 가지지 못하므로 폐기할 것이라고 발언("The Rwanda Scheme has never been a deterrent ... was dead and buried before it started.", 2024.7.6.일 BBC News)

— **망명처리인력(1,000명)을 추가 배치**함으로써 처리시간 지연으로 인한 망명 대기자의 **숙박비용 및 사회복지비용 지출을 최소화**

3 건강보험서비스(NHS) 개선

[현황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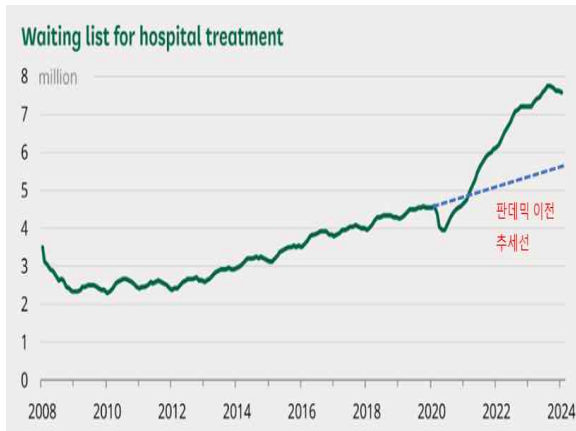
□ 코로나19 이후 **건강보험서비스(NHS) 진료 대기자 수가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까지 증가**하면서 진료 대기자의 대기시간이 최대 18주까지 확대*

* 노동당은 2022년중 NHS 진료 대기자 가운데 사망한 사람이 12만 695명으로 추산된다고 발표(2023.8.30.일)

○ 무상의료시스템인 NHS의 대기시간 증가로 고소득층의 유료 사설병원 이동이 늘어나면서 **영국 의료체계는 사실상 two-tier system(NHS and Private)으로 변화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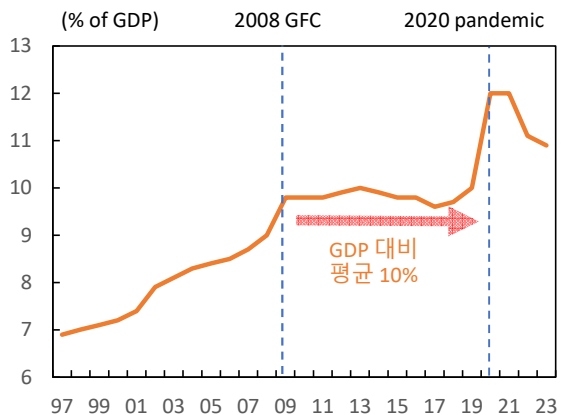
□ **고령화가 진전**되는 가운데 2010년 들어 **정부의 Healthcare 예산이 늘지 않으면서** 의사, 간호사 등 **의료 인력이 부족**해진 데다, 이들의 **처우(임금 및 근무조건 등) 또한 악화**되어 **파업도 잦아진** 데 기인

건강보험서비스(NHS) 대기자 수 추이



자료: NHS England(2024)

GDP 대비 정부 Healthcare 예산 추이



자료: 영국 통계청(ONS)

[정책방향 및 주요 조치]

□ 노동당은 manifesto를 통해 **매주 4만건 이상(매년 200만건 이상) 추가 예약 진료**가 가능하도록 하여 **병원 진료 대기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간다는 목표**를 발표

○ (서비스 공급 확대) NHS 의료 인력의 진료 투입시간 확대를 위해 **근무시간 외 추가 진료 인센티브를 제공**하고 **병원들 간 대기자 공유 시스템**을 구축해 유휴자원을 최대한 활용

○ (서비스 수요 억제) AI 등을 활용한 **NHS 시스템 현대화**를 통해 치료보다는 **예방에 중점을 둔 의료시스템** 구축

4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한 국방·외교 정책 추진

[현황]

□ 그간 영국을 포함한 유럽의 NATO 회원국들은 국가 안보를 위한 비용 지출을 상당부분 미국에 의존*

* 미국은 NATO 전체 국가 국방비의 68%에 해당하는 8,600억달러를 지출(2023년 기준)하였으며 두 번째로 지출이 많은 국가인 독일보다 10배를 상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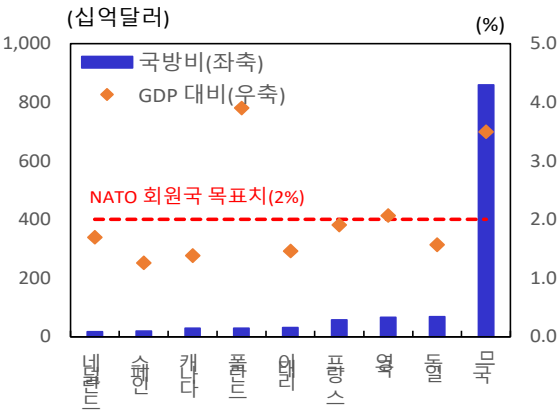
○ 2014년 NATO 회원국들은 국방비 지출 GDP 대비 2% 목표를 2024년까지 달성하는 계획(Vilnius summit 2014)에 동의한 바 있으나 여전히 상당수 국가들(2023년 기준 31개 회원국 중 20개국)이 이에 미달

□ 특히 트럼프는 유럽의 방위는 기본적으로 유럽이 책임져야 한다는 기조 하에 NATO 회원국들의 국방비 지출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*인 만큼 재집권시 관련 압박 수위가 더욱 거세질 가능성

* 트럼프 캠프는 현재 NATO 회원국들의 GDP 대비 국방비 지출 비중을 3%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문(2024.5.3.일, Telegraph, The Times 등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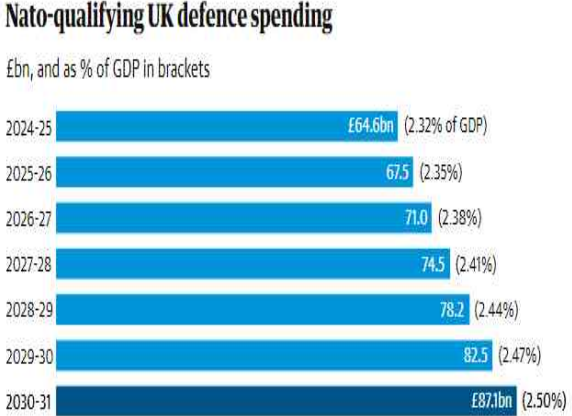
○ 이에 기존 보수당 정부도 국방비 지출을 GDP 대비 2023년 2.3%에서 2030년까지 2.5%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발표

주요 NATO 회원국들의 국방비 지출액



주 : 1) 2023년 기준
자료: NATO

영국 정부의 국방비 지출 계획



자료: 영국 정부

[정책방향 및 주요 조치]

- **노동당 정부는** 기존 보수당 정부의 **국방비 지출 확대** 기조를 이어가되, 유럽 자체 방어를 위해 **EU와의 협력 관계를 보다 공고히 하겠다**는 입장
 - (국방비 지출 확대) NATO에서의 재정적 부담 분담과 역량을 재조정할 필요*가 있다는 인식 하에 **가능한 한 빠르게 국방비 지출을 GDP 대비 2.5% 까지 확대**할 방침
 - * 외무장관 David Lammy는 유럽이 자신들의 안보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는 트럼프 의견에 동의하며, 유럽 국가들이 NATO 방위비 지출 부담을 더 분담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힘(2024.5.6.일, Le Grand Continent 인터뷰)
 - (EU와의 안보협력 강화) 국가 안보에 있어 **EU와의 관계를 재설정**하고 **협력을 강화하는 영국-EU 안보협정***(UK-EU security defence pact)을 **적극 추진**할 계획
 - * **Eurointelligence는 향후 영국-EU 간 협력 가능성이 가장 큰 분야로 국방 부문을 꼽았**음. 영국과 유럽국가들의 전차(tank) 시스템을 보면 중복 투자가 많아 국방비 지출이 낭비되고 있는 등 국방 투자 등에서 서로 협력할 여지가 크다는 점을 제시(2024.6.24.일, "Eurointelligence: Starmer and the EU")

5

재정건전성 확보

[현 황]

-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로 **정부 부채가 급증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민감도가 한층 커진 상황**
 - 특히 **2022년 하반기** Liz Truss 전 총리의 조달계획 없는 감세안 추진으로 촉발된 **금융시장 불안은 보수당의 안정적인 경제운영 능력에 대한 영국 국민들의 의구심**을 야기*
 - * Jeremy Hunt 전 재무장관은 Truss 전 총리의 2022년 실정으로 인해 보수당이 정치적으로 큰 상처(politically scarred)를 입었으며 이로 인해 금번 총선에서 큰 폭 열세에 놓이게 되었다고 발언(2024.6.19.일, FT)
- 그러나 **향후 노동당 정부가** 보건(건강보험서비스 개선), 교육(교사 충원 등), 그린 투자 등 분야에서 **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지출을 확대**할 계획으로 있어 **추가 재원 마련이** 긴요한 상황

[정책방향 및 주요 조치]

□ **노동당 정부는** 기존 보수당 정부에 비해 **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신중한 재정정책 기조를 견지할** 것으로 보이며, 공약 이행 등을 위한 **재정지출 확대에 대해서는 일부 항목 증세로 대응할** 전망

○ 증세로 인한 일반 국민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**국민보험료, 소득세, 부가세 등의 인상은 없을 것**이라고 약속한 가운데, 그 대신 **비거주자, 사립학교, 일부 기업 등으로부터 86억 파운드*의 추가 세원을 확보**할 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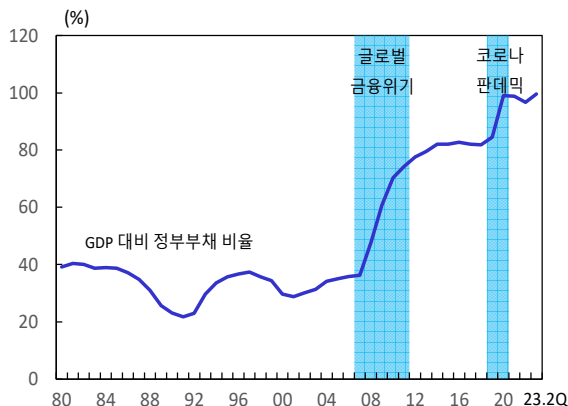
* 비거주자 투자 이득 등에 대한 세금 부과(52.3억 파운드), 사립학교 수업료 부가세 부과(15.1억 파운드), 석유, 가스 대기업 횡재세(windfall tax) 부과(12.0억 파운드) 등 (Labour Party Manifesto 2024: Labour's fiscal plan)

○ 일부 학계 및 정당(Reform UK)을 중심으로 **영란은행의 기준부리**를 현행 기준 전체에서 일부로 변경하는 **tiering system**을 채택할 경우 **상당한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는 견해***도 있었으나 **노동당 정부는 이에 부정적 입장****

* 영란은행은 약 7,600억 파운드의 채권(수익률 2%) 및 기준(부리 5.25%)을 자산 및 부채로 보유하고 있으며, **보유 채권 수익과 기준부리 비용을 netting하여 단순 계산하면 1년에 약 230억 파운드의 손실(영국 GDP의 약 1%)이 예상**. 따라서 **기준 부리를 일부 초과기준으로 제한하는 경우 상당한 재원 확보가 가능**하다는 입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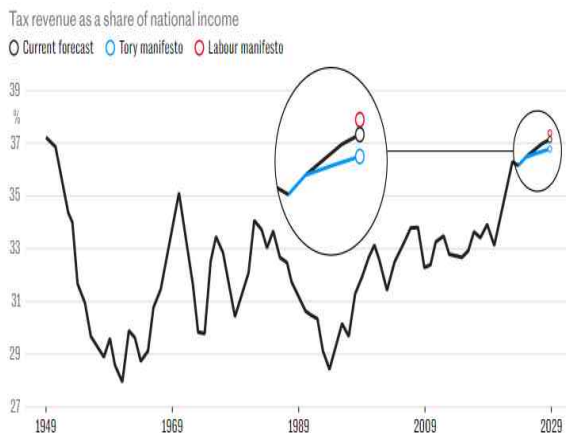
** Rachel Reeves 재무장관은 취임 후 가진 첫 연설에서 **영란은행의 기준부리 방식을 변경하기 위해 영란은행을 압박할 생각이 없다**(no intention of changing the way the BoE pays interest on commercial banks' reserves)는 입장을 확인(2024.7.9.일, FT)

영국의 정부부채 비율¹⁾



주 : 1) 1980~92년은 1분기 기준
자료: 영국 통계청(ONS)

각 정당 공약 반영 국민소득대비 세부담 비중



자료: IFS